

성매매·사기·인신 감금... 교육공무원 범죄 수두룩

광주·전남 5년 1138명 경찰 수사 131명 시도교육청 징계위 회부 들쭉날쭉 징계에 형평성 논란도

최근 5년간 광주와 전남 시도교육청 소속 교육공무원 131명이 각종 범죄 혐의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받았던 혐의는 음주운전이나 도박은 예사였고 아동 성추행, 성매매, 뇌물수수, 사기, 공금횡령 등 파렴치·지능형 범죄도 수두룩했다. 학생생활기록부 분실, 음주운전 적발 후 신분 은폐, 남녀간 부적절한 관계 등으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도 다수 포함돼 있다.

그러나 이들 가운데 극소수만 공직에서 배제됐다는 점에서 사·도교육청이 온정을 베푼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올 9월까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교육공무원은 광주 45명, 전남 86명이다. 같은 기간 경찰 수사를 받은 광주·전남 시도교육청 공무원도 무려 1138명에 달했다.

의원이 시·도교육청에서 확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광주의 경우 18세 미만 아동에 성추행한 사건(1명 해임), 성인을 대상으로 성추행(1명 파면, 1명 해임), 다중밀집장소 성추행(1명 정직 3개월),

주거침입(1명 감봉 1개월) 등이 중징계를 받았다.

도교육청 공무원들의 범법행위는 교육공무원의 자질을 의심케 한다. 학교생활기록부 분실, 성매매, 도박, 인신 감금 등 거의 범죄 백화점 수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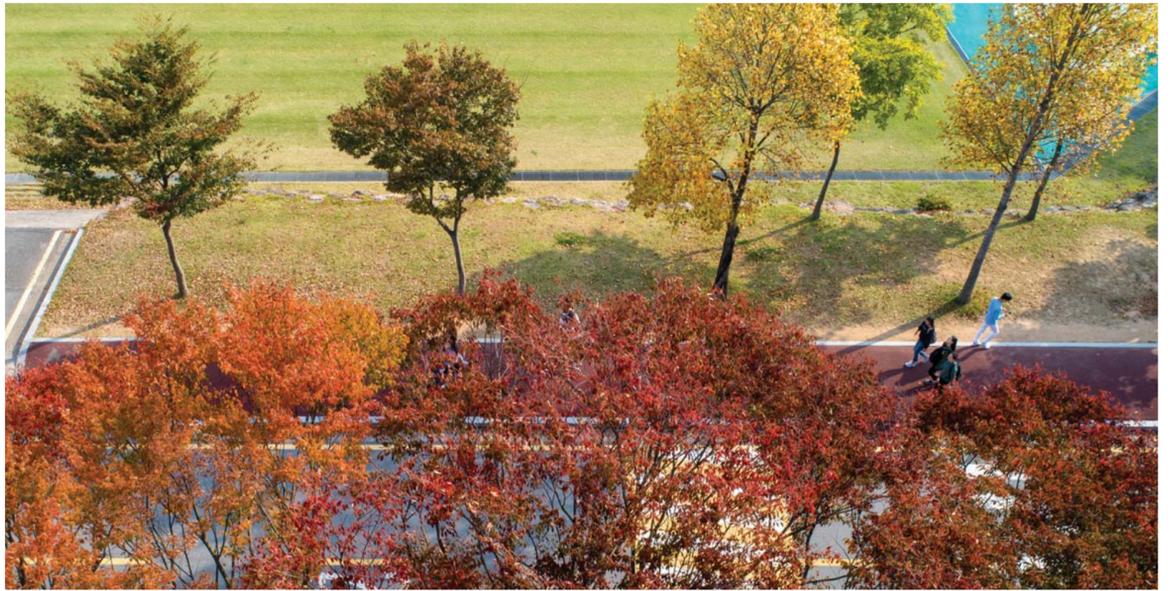
성매매 혐의로 적발돼 감봉 1개월 처분이 내려진 공무원, 아동 성추행(1명 해임, 1명 정직 3개월), 성인 강제추행(1명 정직 3개월) 공무원도 있었고, 공금횡령으로 파면된 공무원(1명)도 있었다. 음주운전에 적발된 뒤 2명 중 1명 짝로 경찰에서 신분을 감추는 것도 예사였다. 이들 대부분은 검찰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감사원을 통해 신분이 탄로났다. 적발 공무원 48명 가운데 25명이 징계 등을 우려해 신분을 감췄다. 광주와 달리 업무 태만으로 징계위에 회부된 공무원이 1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전남 시도교육청은 동일한 징계처사를 놓고도 들쭉날쭉한 징계처분을 내린 경우가 적지 않아 형평성 논란도 일고있다.

시교육청은 성추행 공무원 3명을 파면 또는 해임했는데, 도교육청은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린 경우도 있었다. 신분은 은폐 음주운전 공무원을 감사원으로 부터 통보를 받고도 처분결과는 감봉 1개월부터 3개월, 정직 1~3개월, 강등까지 천차만별이었다.

한편 국회 교육위 소속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경찰 수사를 받은 광주교육청 공무원은 302명, 전남교육청 공무원은 836명으로 나타났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깊어가는 캠퍼스의 가을 완연한 가을로 접어든 15일 광주시 광산구 서봉동 호남대학교 교정을 물들이는 오색단풍 길을 학생들이 걸어가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광주 싱크홀 발생 최근 5년 109건...서울·경기 이어 3번째 많아

최근 5년간 광주지역에서 땅꺼짐 현상(싱크홀)이 무려 109차례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호(서울 서대문구)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광주·전남에서는 총 138건의 싱크홀이

발생했다. 연평균으로 따져 27.6건에 이른다. 전국적으로는 서울, 경기도에 이어 세번째로 많다.

전국 지역별 발생 건수로는 전체 4580건 중 78%인 3581건이 서울에서 발생했으며, 경기 255건(5.6%), 광주 109건(2.4%), 대전 84건(1.8%), 충북 82건(1.8%), 경남 74건(1.6%), 강원 73건

(1.6%), 부산 58건(1.3%), 인천 55건(1.2%), 울산 47건(1.0%), 대구 34건(0.7%), 전남 29건(0.6%) 순이었다.

싱크홀 발생 원인은 하수관 손상(3027건, 66%)이 대부분이었으며, 관로공사(1434건, 31%), 상수관 손상(119건, 3%) 등이었다.

김 의원은 "지자체에서는 조속히 손상된 하수관 교체 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현영 기자 young@kwangju.co.kr

“목포 사립고 시험지 유출 처음 아니다” 진술 확보 유출 시험문제 학생들 돌려 봤는지 여부도 수사

목포 A사립고에서 최근 치러진 중간고사 영어과목 시험문제 일부가 학생에 의해 유출된 사건(광주일보 2018년 10월 15일)과 관련해 해당 학교에서 시험문제 유출이 처음이 아니라는 학부모 주장을 경찰이 확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목포경찰은 시험문제 유출 관련 수사 과정에서 만난 목포 A고 학부모에게서 “시험문제 유출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은 해당 학부모가 경찰과 만나 학교측 평가관리시스템 전반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같이 주장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해당 학부모가 구체적 내용을 진술하는 것을 꺼리고 있어 “수사를 통한 사실 규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학교 안팎에서 제기된 ‘유출된 시험문제 일부는 B군뿐 아니라 다수 학생이 함께 봤다’, ‘학원에서 학생들이 유출된 문제를 돌려봤다’는 의혹도 학생 조사 등을 통해 규명하기로 했다.

경찰은 B군에게서 임의제출받은 휴대전화, 교사 컴퓨터, 시험문제 원안이 저장된 외장하드, 프린터 등 압수물 분석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B군은 지난 2일 오후 4시 10분께 학교 별관 자습실에서 공부를 하던 중 바로 옆 교사 연구실 컴퓨터와 연결된 외장

하드에 담긴 시험문제 파일을 출력했다.

파일에 담긴 11개 문제원안 가운데 10문제가 그대로 출제됐고, 이를 포함 복수 교사가 출제한 총 28문제가 영어시험 문제로 나왔다. 이전 시험에서 영어점수를 70점가량 받았던 B군은 이번 시험에서 90점가량 받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B군은 문제원안을 검토하던 교사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출력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교사 연구실에는 진짜가 아닌 모형 CCTV가 설치됐고 문서 출력을 위해 학생들이 수시로 오갔던 곳이라서 다른 학생이나 교사의 의심을 피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경찰은 시험문제 유출 과정에서 교사 등 학교측 보안관리에 문제점이 있었다는 정황도 다수 확보한 것으로 파악했다.

학교 별관 자습실 옆 교사 연구실 컴퓨터에서 영어시험 문제 원안 일부를 검토하던 교사가 교육부가 지난 7월 발표한 방침을 어기고 해당 파일에 비밀번호 설정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한 것이다.

경찰 수사와 별개로 전남교육청도 이날 목포 A고 시험문제 유출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

/목포·김병관 기자 dss6116@kwangju.co.kr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제4회 마한문화축제

2018 10.19. [금] ▶ 10.21. [일]

국립나주박물관 일원

마한, 새로운 천년을 열다!

마니 | 하니

| 주최 | NA 나주시 | 주관 | 마한문화축제추진위원회

오늘의 날씨						
해돋이	06:39	달름	13:08			
해질	17:57	달진	23:22			
바다 날씨 오전: 풍향 북~북동, 파고(m) 0.5~1.0 오후: 풍향 북~북동, 파고(m) 0.5~1.0						
주간 날씨 17(수): ☀️ 18(목): ☀️ 19(금): ☀️ 20(토): ☀️ 21(일): ☀️ 22(월): ☀️ 23(화): ☁️						